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현실과 개선 방안

소 광 섭 | 건양대 공공서비스관리학부 교수

I. 대학원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

해방 이후 56년이 경과한 지금 우리나라의 초등 교육을 포함한 중등교육까지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체계화는 아직 미성숙한 단계로, 혼미를 거듭하는 단계를 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고등교육 중 대학원 교육은 최근에 양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 배출하는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교육법 제 108조에서는 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 고등교육의 목적에 대해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이론과 광범위하고 정치한 응용 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학원 교육의 목적을 대학교육의 범주 안으로 일반화시키고 있다. 또한 현행 교육법 시행령에서도 대학원에 대한 독립된 특별규정이 없이 각 대학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칙에 명시하고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 대학교육의 목적을 약간 연장하는 정도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원은 지식을 창조하고 응용하며 분배하는 것을 그 주요 기능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 대학원 교육의 성격은 매우 불분명한 상태로 학부에 기생하는 부수적인 존재로 취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대학원을 대학교의 부속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학부시스템 하에서 부수적으로 초과 강의를 하는 형식으로 대학원 학과를 운영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결국 이 같은 부속기관식 대학원 체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고등학문의 질을 더욱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기능을 감당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II. 대학원 교육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원은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의해 1949년 서울대에서 석사 90명을 배출하면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그 후 고려대, 연세대에 석사과정도 설치되었고,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1년에 부산에서 전시 연합대학이 설립되었고 이듬해 서울대 박사 학위 수여가 있었다. 이후 1980년대부터 대학의 수와 학과가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함으로써 2001년 현재 905개 대학원에서 113,814명

“

고등교육 중 대학원 교육은 최근에 양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 배출하는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석사과정 99,635명, 박사과정 14,179명)이 수학과 있다.

이처럼 대학원 교육이 대학의 양적 팽창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대학원이 대학이라는 학부 시스템에 의해 지나치게 종속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양적으로 팽창한 대학원 교육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가적으로 높은 실업률과 낮은 취업률, IT교육은 물론 최첨단 기술개발의 중요성과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시대사적 변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의 대학원 교육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질적인 수준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학원 교육은 양적 성장 못지 않은 질적 수준의 향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학생 수의 증가에 따른 학생 능력의 개인차 심화, 교수 및 시설 여건의 절대 부족, 재정 투자의 미흡,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 고등 교육기관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이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더욱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Ⅲ.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등인력 양성 계획과 문제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을 통해 연구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지역 산

업 수요와 연계하여 지역대학을 특성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대비한 고등인력 양성 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두뇌한국21 사업'을 2005년까지 5년 단위의 표와 같이 추진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 따르면 대학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처방의 대부분이 약간의 재정적 지원으로만 일관된 느낌이 있다. 즉, 구체적인 독립적인 전문대학원의 시스템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방안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어 형식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Ⅳ. 대학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1. 문제점

앞에서 살펴 본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대학원이라는 최고등 학문에만 전념하는 집중적인 연구와 강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채, 대학이라는 학부 시스템에 무임승차하는 더부살이의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체계적이고 심층적이며 독립적인 대학원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최근의 2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 학부의 양적 팽창에 편승해 대학원의 양적 팽창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표	현재	2005년
대학원 제도 및 학위종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기능 미분화 • 전문대학원 제도 미확립 • Academicism과 Professionalism간 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원 제도 정착 • 학문학위와 전문학위 과정간의 기능 분화 • Academicism과 Professionalism간 조화
대학원 전용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시설 미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전용 기숙사, 연구동 및 전자도서관 설립
대학원생 연구 지원 및 대학생 장학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지원 거의 없음 ※ 시간강사를 하지 않고는 박사과정을 하기 어려워 내실있는 연구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박사 과정생에 지원 확대 - 지원 대상 : 연간 약 2만 명 - 지원액(PA/TA) : 월석사 40만원, 박사60만원 • 대학생 약 14,000명 월 20만원 ※ 인건비를 받으며, 강의 연구로 연구 실험에 전념 가능
신진 연구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후 과정생 지원 미비 - 연간 약 5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문 후속 세대 육성 집중 지원 - 박사후 과정생 : 연간 약 1,500명 - 신진 계약교수 채용 지원 : 연간 약 1,000명 - 지원액 : 박사후 과정생 연 1,500만원, 계약 교수 연 2,400만원
대학원 중심대학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 정원 확대 경쟁 • 대부분 교수 학사과정과 대학원 과정 겸임 • 포항공대, 과기대만 일부 대학원 중심대학 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뇌한국 21 사업 참여 대학 약 5,000여 명의 학사과정 정원 감축 • 대학원 겸임교수 및 산업계에 기반을 둔 겸임교수 확대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이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진입
대학교육 풍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만 하면 쉽게 졸업 • 공부하는 유인 체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려운 관행 확립 • 대학원 무시험 선발(학부 성적 위주 선발)로 학사과정 충실화
대학원 진학 풍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대학 출신자 위주 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교 출신 학생 50% 이상 선발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두뇌21 사업'

자 질적인 향상을 기하는데 그다지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셋째, 국가의 인적자원을 축적하기 위한 재정적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학생들의 과도한 등록금에 의존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고등인력 자원을 양성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오지 못했다는 점이다.

2. 개선 방안

앞에서 제시된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1) 대학의 학부와 구별된 독립된 기능과 목적, 그리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원을 중심의 명실상부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원중심대학”이란 용어 자체를 폐기하고 “~ 대학원”의 형태로 전문대학원의 학교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즉 예산·인력·기능·목적·운영·조직 등이 대학의 학부와는 다른 완전히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대학원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대학의 학부와 구별된 독립된 전문대학원 육성을 통해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전문대학원 설치와 재정적·제도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두뇌한국21 사업에서 보여진 바와 같은 형식적인 재정 지원의 한계를 넘어서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인적자원의 개발에 관한 투자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실현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교육부 차원에서 전문대학원의 전공영역별 유형과 범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대학원간 경쟁을 유도하되, 마치 유행병처럼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대학원의 난립으로 발생하게 될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지나치게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고 경쟁력 있는 연구기관을 쾌적한 환경의 지역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지방에서 경쟁력 있는 산학연구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1950년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1인당 소득이 전국 최하위였고 따라서 대학에서 훈련된 연구인력이 이 지역에서 직장을 구할 수 없었지만, 1955년 주지사인 호지스(L. Hodges)는 기업인과

대학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대학의 연구인력을 활용한 지역경제 발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결과 리서치트라이앵글 연구소를 설립해 이곳에 1965년에 IBM과 국립보건원의 환경연구원의 입주 시작으로 다국적기업 관련 연구기관들이 입주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킨 바 있다. 이와 같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쟁차원에서 대학원과 기업들을 지방에서 연결시킴으로써 산학협력력을 통한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기본적으로는 각 대학원 설립을 위한 신청자의 창의적 계획안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을 전제로 전문대학원의 인가를 위한 평가 항목을 설정하고 제시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혹은 전공영역별로 과도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타당한 할당 기준을 설정할 것이 요구된다.

3) 종합대학교의 백화점식 다양한 학과의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원으로 학과 구분 없이 전공분야를 특성화시켜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첫째, 적극적인 능력개발과 연구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특성화를 위한 지원분야의 연구 실적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연구 진행과정상의 어려움이나 상황 변화에 대한 고려 등을 위해 평가는 실적 결과는 물론 중간 점검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대학원 특성화를 위한 지원은 중장기 과제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되, 이처럼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한 실적을 토대로 차기 지원에 반

영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위한 동기부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질적으로 향상된 실천 학문으로서의 대학원 교육이 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공·민간분야에서의 대학원생 인턴제도(part time system)를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즉, 대학원에서 연구한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이론의 실용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대학원 연구과정 중에 인턴제를 통해 연구의 질을 높이고, 연구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물론 체계적인 연구를 가능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원 교육 중에 인턴제도의 형식으로 관련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실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대학원 교육을 직무와 직결되도록 할 경우 이론의 현실화와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5) 대학원을 졸업하게 될 고등인력에 대한 인적 자원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고등교육 실업자 양산이라는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로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할 필요가

있다. 즉 일정한 실적을 전제로 대학원 교육 이후의 생활에 대한 안정을 보장해 줌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대학원의 연구 활동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개인의 질적 향상을 넘어서서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공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고등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고등인력 활용의 제도화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학원 입학 및 연구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대학원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원 교육에 지출되는 비용은 국가의 인적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자본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같은 투자비용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다름 아닌 국가 및 사회의 유용한 인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소광섭

경희대에서 행정학 석사, 전주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건양대 기획연구처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공공서비스관리학부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주요 논저로 『오점 위주의 행정학의 이해』, 『조직론의 핵심원리』, 『조직과 노조에 대한 이중물입 요인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